

원 구성 이견 ‘여전’... 野,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강행하나

‘야권 주도 개원’ 22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선출 갈등
與 “단독처리 시 일정 전면 거부”
野 “與, 관례 핑계로 국회법 무시”
협상 결렬되면 野 모두 차지 가능성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와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한 데 이어 여야가 원구성 법정 시한이 넘도록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 운영위원회 등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에서 바라 본 국회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과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년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문리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된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

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올해 첫 순방... 중앙아시아와 ‘K-실�크로드’ 협력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민방문
지난 12월 순방 이후 6개월 만의 재개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박7일)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이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3개국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хам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5박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민 방문길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1일 네덜란드를 국민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뉴시스(대통령실)

한다. 투르크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크야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

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윤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와 양국 간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카자흐 간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13~15일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만찬

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야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

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과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카자흐·우즈베크·투르크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하기로 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서예진 기자

‘지구당 부활’ 논란... “정치개혁” vs “불법 정치자금 통로”

이재명·한동훈 “정치 진입장벽 낮춰야”
유승민 “원외 당협위원장 위한 것”

여야의 주요 차기 대선 후보급 인물들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제도 부활을 22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설치됐던 중앙 정당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당원협의회, 민주당이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조직을 꾸리던 전에는 지구당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당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지역구 선거의 선거 사무실로 활용되거나 막대한 정치자금 이 흘러들어오는 등 폐단이 쌓인 끝에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됐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부활하

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른 의견도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원외 당협(지역)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정치후원금을 받아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지는 것인가”라며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

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고 했다.

지구당제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이어지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낼만큼 한국 정치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부활할 우려를 품는 사람들도 많다.

/백태홍 기자 pth7285@